

참여정부의 中小·벤처企業 政策方向

2003. 12.

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

宋 在 彬

목 차

I. 중소기업 현황 및 최근 동향	1
1. 중소기업 현황	1
2. 최근 중소기업 동향	2
II.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	4
1. 그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	4
2.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	5
III.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	6
1.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추진	6
2. 정책자금 조달여건 개선 및 지원체계 개편	8
3.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	10
4.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기반 확충	12
5. 벤처기업의 지속적 육성 및 M&A 활성화	14
6.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	17
7.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보호제도 개편	19
8.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	20

I. 중소기업 현황 및 최근 동향

1. 중소기업 현황

- 중소기업은 약 290만개로서 전체 사업체수의 99.8%, 고용의 85.6%를 차지하는 등 **우리경제의 중심축**

구 분	전 체	중소기업	중기비중(%)
고 용(천명)	11,650	9,969	85.6
기업수(천개)	2,878	2,872	99.8

* '01년말 기준(광공업통계)

- 특히,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매년 증가

구 분	99년	00년	01년
사업체(천개, %)	90(99.2)	97(99.3)	104(99.4)
종업원(만명, %)	180(73.0)	196(74.0)	199(75.8)
생산액(조원, %)	227(47.5)	268(47.4)	282(49.1)

-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수출의 42%까지 대폭 증가

- 중소기업 수출 비중 : (98말) 31.0% → (02말) 42.0%
- 특히 벤처기업의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도 4%까지 상승

-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이 큰 역할 수행

- 중소·벤처기업은 '97~'00년간 18만개가 증가하여 경제회복의 지렛대 역할
- 고용면에서도 활발한 창업을 통해 171만명의 일자리 창출

2. 최근 중소기업 동향

□ 국내 경기는 6월들어 증가하였으나 7월이후 다시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(전년동기·월대비)

	'02.4/4	'03.1/4	'03. 5	'03. 6	'03. 7
· 산업생산(%)	9.5	6.1	△0.9	8.4	0.7
· 도소매 판매(%)	4.4	△3.2	△1.9	△0.4	△1.8
· 설비투자추계(%)	3.1	△3.4	△3.7	2.7	△11.0

□ 중소기업 생산증가율도 6월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7월들어 다시 하락되는 양상을 보임 (전년동기·월대비)

	'02.3/4	'02.4/4	'03.1/4	'03. 6	'03. 7
· 중소기업 생산증가율(%)	2.3	4.2	2.0	5.3	2.2
· 중소기업 평균가동률(%)	72.7	71.6	70.0	68.3	66.7

□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『중소제조업 경기국면지수』¹⁾는 감소세가 둔화되어 9월을 저점으로 상승될 전망 (7~9월은 예측치)

	'02. 4/4	'03. 1/4	'03.6	'03.7	'03.8	'03.9
· 경기국면지수	100.7	101.4	100.0	99.6	99.5	99.5
(전월대비증가율)	(0.4)	(0.7)	(-0.6)	(-0.4)	(-0.1)	(0.0)

1) 중소기업 경기와 동행성을 갖는 중소기업 생산지수·출하지수(통계청), 노동부입량(노동부), 제조업 가동률 지수(통계청) 등 4개 경기관련 지수로 종합하여 중소기업 경기순환을 설명하는 지표(기준년도 2000년)

□ 중소기업 수출은 금년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

	'01	'02	'03. 1~7
▪ 수출증가율(%)	△12.7	8.0	17.1
· 대기업	△21.1	9.7	15.6
· 중소기업(벤처기업)	1.7(14.5)	5.7(7.3)	19.3(28.2)

□ 중소기업 창업은 '02년에 비해 둔화된 반면, 부도법인수는 증가 (8대 도시기준)

	'00	'01	'02	'03.1~7
▪ 신설법인수(A, 개)	41,460	39,609	38,972	20,719
▪ 부도법인수(B, 개)	2,800	2,349	1,973	1,384
* 창업배율(A/B,배)	14.8	16.9	19.8	15.0

□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미흡한 중소제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어려운 상황

	'02.10	'02.12	'03.6	'03.7
▪ 평균 대출금리(%)	6.51	6.49	6.20	6.15
▪ 자금사정 지수 ²⁾	90.0	85.5	74.2	71.5

2)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에 대한 체감지표로서 100을 기준으로 하여 호전 및 악화를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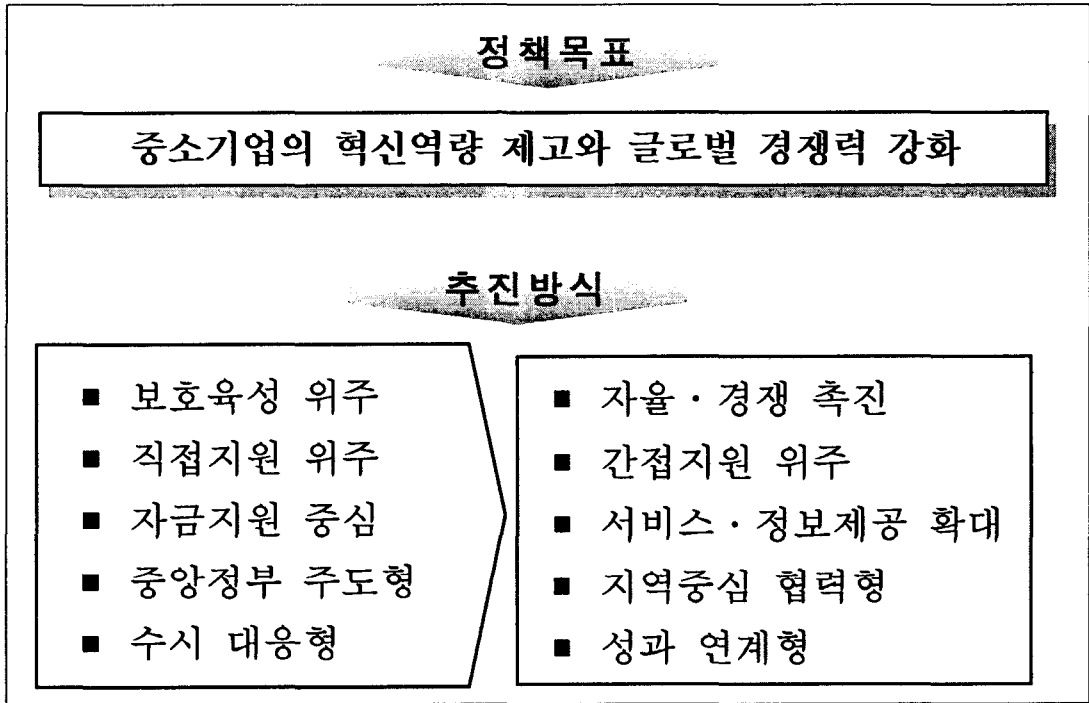
II.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

1. 그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

- 그간 정부는 자금, 기술, 인력, 판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확대에 기여
 - 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“보호와 육성” 위주로 전개
 - 특히 90년대 중반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기술, 정보화, 수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
 - * 중기청 순수사업 예산 : (96) 146억원 → (03) 3,666억원
 - 지원사업 수 : (96) 10개 → (03) 59개
-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의 지원 대상별 차별화 미흡과 지원방식 비효율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은 기대에 미진
 -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70%수준에 머물고 있음 (중기협 기술활동실태보고서)
- 다수 관련부처·기관이 각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호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여 유사·중복지원 문제 노정
 - '03년도 정책자금 : 6조원 수준 (13개 부처)
-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자생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충분치 못하여 기업의 질적 변화 유도에도 미흡

2.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

- 중소기업 정책목표와 추진방식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환



- 기업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정책 수립·추진

- 혁신형 중소기업(2만여개)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기술·신산업 성장엔진으로 육성
 - 수요연계 기술개발, 기술평가체계 구축, 벤처캐피탈 선진화 등
 - * OECD국가의 경우 중소기업의 약 10%가 혁신형 기업
- 제조·유통 등 일반 중소기업(30만여개)은 생산·경영구조 개선 및 경쟁체제 도입 확대로 자생력 배양
 - 생산구조 고도화, 산학연기술개발, 보호제도 개편 등
- 생계형 소상공인은 지원체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Ⅲ.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

1.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추진

-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,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기인한 인력난 지속, 생산 및 수출에 차질 초래
 - *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: ('02) 9.4% → ('03. 1/4분기) 9.0% (20만명)
- 산업연수생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, 생산직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 미해소
- 심화되는 대기업과의 근무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인력지원 인프라 구축 시급

□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촉진

-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무기피요인(열, 냄새, 분진 등) 해소사업을 5개년간 중점추진 (1,500억원 수준)
 - * 지원규모 : ('02) 124억원 → ('03) 174억원 → ('04~'07) 年 300억원
- 인력수요 절감을 위한 생산자동화 등 설비투자 지원 확대
 - * 지원규모 : ('02) 8,500억원 → ('03 당초) 1조원 → ('03 변경) 1조 1,000억원
-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의 확대추진(당초 25천명 → 40천명)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 유도
- 러시아·인도 등의 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수행토록 지원 ('03년 250명)

- 중소기업의 안정적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
 -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, 외국인력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 추진
 - 향후,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 병행 실시에 필요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
-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정 ('03.8.30 국회의결)
 - '04.1.1일부터 시행하여 구조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(시행령·시행규칙 '03년말 제정)

<주요내용>

-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인력유입 여건 조성
 -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 양성,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
 - 중소기업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범위 확대
 - 주택의 우선분양, 해외연수 지원, 창업지원 우대 등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대방안 마련
-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 강구
 - 도입과정에 경영진단 및 컨설팅 제공, 도입후 추가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및 생산성향상 지원 병행(자동화시설자금, 공정개선 등)
- 산업고도화, 지식집약화에 대비한 고급인력 확보 지원
 -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및 전문인력 고용시 고용장려금 지급
 - 업종별 조합단위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추진
 - 교수·연구원의 중소기업 겸직허용 확대 등
- 청년층, 여성인력, 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취업여건 조성
 -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장려금 지급
 - 공동보육시설 지원,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시책 우대 등

2. 정책자금 조달여건 개선 및 지원체계 개편

- 저금리기조 유지 등 指標上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과거에 비해 호전되고 있으나 體感 자금사정은 악화
- 13개부처를 통해 6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중 자금조달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시스템의 개편이 필요

□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활용 여건 조성

-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
 - 정책자금 : ('02) 2조 9,507억원 → ('03) 3조 4,486억원
-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,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적극 유도
 - 정책자금 신용대출 : ('02) 2,235억원 → ('03) 4,000억원
 - * 금융기관 신용대출 현황('02년) : 전체대출액 166조원중 56조원 (33%)
- 회사채, 매출채권 등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「중소기업 전용ABS」 발행 추진
 - 중진공 후순위채 인수 : 500억 (발행계획: 약 3,000억)
 - 신보를 통한 발행지원 계획: 약 2조원 (추경 1,500억 반영 12조원 보충)

□ 신용보증 및 신용거래의 안정성 제고

- 금년중 42.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('02년 41.3조원)하여,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 (추경 2,000억 반영)

- 신보(일반기업), 기술신보(기술력 우수기업)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간 보증업무의 특화를 유도
 -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설립('02년 15개 → '03년 16개)
- 전자보증서 발급 및 신청서류의 간소화 등 수요자 위주의 보증심사체계 구축을 추진
- 「어음보험제도」를 「매출채권보험제도」로 확대하여, 매출채권 등 기업간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포괄하여 지원
 - * '03년 당초 100억에서 추경에 200억 추가반영 (어음추가인수 1,500억)

□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합·정비

- 중소기업 예산 사전조정제를 도입하여 다수부처에 산재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·운용 도모
-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시설·창업·수출자금 위주로 단순화
 -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은 폐지하고 민간금융기관을 활용 하되, 생산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확대
 - 소상공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합 집행권은 지자체로 이관

□ 정책자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효과를 제고

- 지원·비지원기업의 개선효과를 평가하여 지원방식을 조정
-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시책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
 - * 예) 시설자금은 300인 이하, 지도사업은 100인 이하를 우선 지원

3.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

- R&D투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 (선진국의 70% 수준)
-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개발후 시장진입에 애로, 개발기술이 사장되는 사례 빈번
- 기술평가 기법이 선진화 되지 못하여 신용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가 미흡

□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 확대

-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사업 확대 지원 ('03년: 1,650개사, 1,100억)
- 지방의 대학·기업·연구소 등 협력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('03년: 341억)
- 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「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」 시범 운영 ('03:10개과제, 20억)

□ 수요자와 연계한 신기술개발 적극 지원

- 대규모 수요기관이 품목선정과 개발 성공후 구매를 보장 (5년)하고, 중기청이 기술개발을 지원
- 국방부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진행중 (현재 68개 품목)
 - '07년까지 수입대체 군수품 200개 개발(2,200억원 구매효과)
- * 연내 한국전력, 수자원공사, 가스공사, 한국통신 등과 순차적으로 협약체결 확대 추진 예정

□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(KOSBIR)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
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속 지원 : (03) 15개기관, 5,649억
- KOSBIR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
 - 참여기관(15개)은 타당성연구단계를 거쳐 기술개발을 지원
 - 중기청은 개발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기능을 강화

□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」 수립

-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
 - 기술통계를 새로이 작성하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

□ 기술평가와 보증기능의 연계 강화를 위해 『기술신용보증기금』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육성

- 『기술평가센터』의 평가전문인력(현재 128명)을 확충하고 첨단 신기술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풀 구성·활용
-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 타당성 평가와 신용보증의 연계 확대 (기술개발성공기업 특별보증제도 도입 추진중)
- 기술혁신기업(Inno-Biz)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인 선진형 평가모델로 발전시켜 민간분야로 확산

4.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기반 확충

- 최근 소비 위축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의 동반 위축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수출 노력 강화 필요

* 중소기업수출증가율(%) : ('02) 5.7 → ('03.5월) 5.5 → (6월) 15.1 → (7월) 16.2

-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의 경우, 안정적 판로확보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큰 제도이나, 제도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개선 필요

□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추진

-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 1,000개사를 엄선, 자금 및 수출마케팅 등을 초기단계부터 밀착 지원
- 주요 수출국 등에 수출대행전문회사(EMCs)를 발굴, 내수기업의 수출대행 및 수출 Know-how 전수 ('03년 100개사)

□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 전개로 신규 수출시장 개척

- 틈새시장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확대(60회 → 98회)
- 주요 수출국에 수출인큐베이터 추가 설치(3개 → 5개지역, 100개사)
- Wal-Mart 등 해외소매유통체인과 연간 2조달러 규모의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전략적 타겟 마케팅 적극 전개
- 아프리카, CIS 등 미개척지역과 중국 등 신흥시장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파견(5개월)하여 수출전문인력으로 육성 (115명)

□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강화 추진

※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매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매 ('03년 44.8조원)

① 일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(8~9월)

- 관계부처, 전문가 합동 점검반 편성·운영

②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

- 정기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의 법적 근거 신설 추진 (중소기업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중)

- 소액 구매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구매제도 신설 추진
(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협의)

* 미국의 중소기업 전용조달(Small Business Set-Asides)

- 10만불 이하 공공구매는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구매가 원칙

-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발주시 하도급 계약서 준수 여부 등 공정 하도급 감시의무 법제화 추진

(중소기업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중)

- 발주정보를 품목별로 세부화하는 등 Online 공공구매정보망 기능 확충

*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02년 22,571건 입찰정보 제공

5. 벤처기업의 지속적 육성 및 M&A 활성화

- 지난 5년간 벤처기업은 생산·수출 및 고용창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

* 벤처 위상('02년말 기준) : GDP의 2.5%, 총 고용의 1.6%, 수출의 4%

- 최근 벤처업계 전반이 위축되고,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경우 벤처산업 기반이 손상될 우려

* 벤처투자(월평균, 억원) : ('00) 1,673 → ('01) 741 → ('02) 514 → ('03.4) 44

* 코스닥지수(연중최고) : ('00) 293p → ('01) 90p → ('02) 96p → ('03.4) 43p

- 사업실패 또는 부실 벤처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보유기술 또는 자산의 사장화 방지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M&A가 유용한 수단

□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고도화를 추진

- 시장평가에 의한 선별·육성되도록 벤처캐피탈, 코스닥시장 및 M&A시장 활성화에 주력
- 벤처기업 지원도 직접지원보다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
- 특히, 벤처확인제도는 2005년에 조기 종료(당초 '07년)
 - 종료 시까지는 기업의 혁신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, KAIST 등 16개 민간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
 - 벤처확인 관련 행정절차도 온라인화하여 투명성 확보에 주력

□ 벤처캐피탈 선진화 도모

- 벤처투자 회수기반 확충을 위한 Secondary Market 조성
 - 코스닥 이외의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증시 침체에 따른 벤처투자 위축을 최소화
 - 금년중 벤처캐피탈 투자주식을 인수하는 유동화 펀드 조성 (03년중 600억원 결성 추진)
- 현행 회사 중심의 벤처투자 제도를 펀드운용 중심의 선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도입 추진
- 투자조합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(Fund of Funds) 설립
 - 정부의 투자조합 출자를 점차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간접 출자방식으로 전환 (03년중 500억원 규모로 설립 추진)
- 연·기금의 벤처투자재원 확충 : 국민연금 2,000억 규모 예정

□ 벤처기업의 국내·외 수요 창출 지원

- 전자정부 확대, 국방물자 수입대체 등을 통해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참여기회를 확대
- 유망 벤처기업의 美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미국 SBIR 참여 프로그램 및 교포자문단(27명) 운영
- 벤처기업해외지원센터(21개) 및 해외공동물류A/S센터(보스톤) 설치 등 벤처제품의 시장개척 및 현지유통시스템 구축

□ 벤처기업 M&A 활성화 방안 추진

① 합병 저해요인 제거 및 절차 간소화

- 미공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사가능 주주의 범위 및 행사가격 산정기준 등을 개선
- 코스닥기업이 미공개기업과 소규모 합병시, 미공개기업의 코스닥 등록 심사요건 완화
- 합병법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합병법인이 미공개 벤처 기업일 경우,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

② 용이한 주식교환 환경 조성

- 벤처기업 주식이 현물 출자될 경우, 기술거래소 등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를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같음
- 합병 또는 제휴를 위해 교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교환 주식의 이익 실현시(매도)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

③ M&A펀드의 역할·기능 재정립

-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(CRC)에 대해 사모M&A펀드 운영기회 부여
-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시적 경영지배를 위한 투자 허용

※ 벤처기업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추진중

6.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

- 금융·기술·인력·판로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
 - 중소기업의 57%, 벤처기업의 72%가 수도권에 소재
-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및 정부부처간 유기적 협력체제 정립이 시급

□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

-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('02년 63.7% → '05년 70.0%)
-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시 재정력 지수가 낮은 지자체를 우대 지원하고, 운용방법을 개선
 -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(8억원→10억원), 지원조건 완화 개선 (구비서류 단축 등)

□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전환

- 소상공인지원자금 집행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(59개소, 290명)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밀착지원 유도
-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(03년 3,300억원)도 소상공인지원(03년 3,500억원)에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이관

□ **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내실화**

- 시장 재개발·재건축 지원사업은 **지자체로 이관**
- 재래시장의 **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사업**을 적극 추진 하되, 지자체의 **재원분담 능력**을 감안하여 **단계적으로 이관**
 - 건물 리모델링,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, 시장 고유브랜드 개발 등

□ **『국가균형발전위원회』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 추진**

- 대학내 산재된 중기청 소관 **기술혁신지원기구를 「중소기업협력단」**으로 **통합 운영**
 - 창업보육(242개), 기술지도(110개), 산학연기술개발(197개), 기술이전(18개)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연계지원체계 구축
 - **『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』**를 지역내 핵심기업의 **집적·네트워크화 거점**으로 육성·활용
 - 사업주체를 지자체 중심에서 지자체와 지방대학, 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**민·관 협력체제로 운영 전환**
 - 중앙정부 지원예산은 하드웨어 보다 기업성장에 필요한 **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**으로 전환
- * 대덕밸리, 마산벤처지구, 광주첨단지구 등 전국 24개 지구 지정(비수도권 16개)

□ **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·군의 향토산업 육성이 용이하도록 지원 추진**

7.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보호제도 개편

- 사업영역과 판로지원을 위해 3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환경변화에 따라 **실효성 저하** 및 중소기업의 **자생력 배양에 지장을 초래**

- * 고유업종지정 45개(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)
- * 지정계열화업종 24개(대기업과 3년간 장기공급계약)
- * 단체수의계약품목 146개(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 연간 4.5조원)

- 고유업종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**시장경쟁적으로 개편**

- 고유업종제도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**사업조정제도 운영 강화**

- 지정계열화제도는 대·중소기업간 자율적 생산협력체제로 전환

- 대·중소기업 **협력알선센터 설치**(전경련·중앙회 공동)

-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사업 지원

- 단체수의계약제도는 **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**

- 실태조사, 전문기관 연구 및 업계·구매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

- 운영상 큰 문제가 발견되는 부적격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

-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된 품목은 **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**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판로난을 완화

- 보호제도개편을 보완할 수 있도록 **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**

8.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

- 대부분의 지원시책이 “일몰개념” 없이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력 제고 노력보다는,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
- 신규시책은 증가하는 반면, 기존 지원시책에 대한 평가·정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의성 및 효율성 저하
 - 중소기업청 소관 지원사업수 : ('96)10개 → ('03)59개

□ 신규시책 수립시 「일몰제(Sunset Rule)」 및 「지원예시제」 도입

- 한시적 지원이 합당한 시책은 “일몰제” 적용, 경상사업화 방지
- 지속추진 시책의 경우에도 대상기업의 지원기간 한정 등 “지원예시제” 도입으로 자생력 제고 노력을 유도

□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현행 지원시책 종합평가 (6-11월)

- 「개선·강화」, 「현행유지」, 「폐지·축소」, 「지방 또는 민간이양」 등으로 구분, 기존시책 일제 정비 예정

□ 지원시책에 대한 상시적 평가·정비 시스템 구축

- 관련 전문가, 업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시책평가단 구성, 운영
- 정책평가모델 및 성과측정지표 개발, 주기적으로 시책진단

□ 지원시책 담당자의 정책집행 현장체험을 통해 실효성을 평가